

경북도, APEC 정상회의 국비확보 난항... 성공개최 '빨간불'

정부 요청 예산 총 13건, 2613억 국비 요청액 981억 중 4% 확보
응급의료대책 사업비 등 미확보



경주시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관련 추경예산 국비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관련 국회의 추경예산안 확보가 녹록치 않자 지방비로 대체하는 등 정상회의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일 경북도, 경주시 등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예산은 총 13건, 2613억원이다.

이중 국비 요청액 981억에서 12일 현재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전체 예산 요구액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에이펙 행사장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정부 요청액은 75억원이지만, 현재까지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자 지방비 150억원을 대체

확보할 방침이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40억원만 확보했다. 정부에 요청한 13건, 981억원 중 유일하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에이펙 문화동행 축제와 관련, 총 사업비 100억원 중 정부 요청액 50억원 가운데 한푼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지자체는 이 행사와 관련,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클린 에이펙 가로경관 개선사업(정부 요청액 100억원 미확보) ▲

에이펙 정상회의 응급의료대책 사업비(정부 요청액 10억원 미확보) ▲ 에이펙 정상회의 주변 관광지 경관 개선사업(정부 요청액 100억원 미확보) 등이다.

특히 외국 정상들이 방한했을 때 의료 긴급상황 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료대책 사업비'를 비롯 '지역 응급의료센터 확장구축 및 VIP전용 병동 조성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자칫 외국 국빈들의 긴급 의료 시스템 미작동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할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탄핵정국속에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비확보가 불투명 한 상태에서 급하게 지방비라도 확보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정치적 논리를 벗어나 국가적 행사인 에이펙 정상회의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전액 지방비라도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이지만, 행사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APEC의 장국으로서, 올해 말 비공식 고위관료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연중 200회 이상의 각급 APEC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1조 8000억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만 해도 생산 유발 효과 97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654억원, 취업창출효과 7908명이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영산강 수질, 11년 중 가장 좋아

광주·전남을 가로지르는 영산강의 수질이 최근 11년 중 가장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산강 수계를 대표하는 6곳(광주 2곳·담양·나주·무암·영암천)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평균 농도는 2.3mg/L로 나타났다.

최근 11년간 평균 BOD 농도가 3.5mg/L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수질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영산강 BOD농도는 2014년 3.2mg/L, 2015년 3.6mg/L, 2016년 3.4mg/L, 2017년 3.9mg/L, 2018년 3.4mg/L, 2019년·2020년 3.6mg/L, 2021년 3.7mg/L, 2022년 4.3mg/L, 2023년 3mg/L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사천시 농식품사업 예산 519.9억 확정

사천시는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박동식 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정책 심의를 거쳐 내년도 농식품사업 예산을 신청한다. 이날 심의회는 농업 정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축산, 유통, 기반 정비, 산림 6개 분과 위원회별 사업 제안 설명과 심의 의결을 거쳐 30개 사업, 총사업비 519억 9000여만원을 확정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서면교차로 상징 정원 조성

부산시는 부산 중심부에 위치한 서면교차로를 자연형 정원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서면교차로 상징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서면교차로는 5곳의 교통섬이 있는 곳으로, 시는 서면교차로를 생태·자연주의형 정원으로 발전시켜 녹지공간 하층부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해 시민들이 도심에서 변화무쌍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부산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주의형 교통섬 상징 정원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진주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시행

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전남도, 탄소중립 위해 1950억 투입 전기·수소차 1만2578대 구매 지원

다자녀 가구, 전기택시 등 추가 지원
주민등록 관할 시·군서 신청 가능

전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19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수소자동차 1만2578대 구매를 지원한다.

이 중 전기차는 1만1746대다. 차종별로 승용차 8049대, 화물차 2887대, 버스 87대, 어린이통학차 17대, 이륜차 706대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승용차는 1463만원, 화물차는 2400만원, 어린이 통학차는 1억2100만원으로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구매 시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전기택시는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생애 첫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전기화물차 구매 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의 경우 국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민간, 공공전기차들이 충전하고 있다. /광주시

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수소차 보급 대수는 832대로 승용차 763대, 저상버스 25대, 고상버스 44대다. 보조금은 1대당 최대 승용차 3750만원, 저상버스 3억3700만원, 고상버스 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자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에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등 세부적 내용은 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목포시, 청년 위한 창업·휴식공간 조성

청년쉼터 다락·청년센터 누리

목포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및 휴식 공간인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과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인 '목포 청년센터 누리'를 조성한다.

'목포 청년쉼터 다락(多樂)'은 온동 3-9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연면적 299.84㎡)의 건물로, 1층은 창업 공간(카페), 2층은 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2층은 지역 청년들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340여 권의 도서가 마련되어 있어 독서가 가능하다. 또한, 모임 및 스터디를 위한 회의실도 제공되며, 회의실은 대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시설인 '목포 청년센터 누리'는 보광동 1가 1번지 일원에 위치

한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421㎡)의 창업지원 시설이다. 이곳은 7개의 창업 점포 공간(총면적 252㎡)과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로 구성된다.

창업 점포 공간은 사용 허가를 통해 운영되며, 총 7개실(각 36㎡)로 구성된 개별 창업 점포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목적 창업지원 시설에는 ▲전시·공유 공간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실 ▲문화프로그램실 ▲코워킹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등 창업자들의 업무와 네트워킹을 돕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이 두 청년 시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지난달 취업자 수 7000명 줄어

고용률 62.1%... 전년비 0.2%p ↓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며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경상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2.1%로 전년 동월 대비 0.2% 포인트(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오른 67.5%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7000명), 농림어업(5000명)은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7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000명), 건설업(8000명), 제조업(1000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만4000명(3.7%)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5000명(2.2%), 일용근로자는 6000명(14.9%)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8000명(4.3%), 무급가족종사자는 2000명(2.2%) 각각 줄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교육청,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30분 통학권 보장 확대·시행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특수학교 통학버스를 증차해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확대·시행한다.

시교육청은 관내 15개 특수학교 중 학교 자체 노선 조정으로 미신청한 6개교를 제외한 특수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16대의 통학차량을 우선 증차한다.

또 통학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증차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특수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최단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신입생 수요를 반영해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통학노선 조정을 실시하고, 추가 차량을 포함한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